75세 이상 백신 접종 시작

전주시, 72개 노인복지시설 입소·이용·종사자 등 대상 2분기 접종 나서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우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와 이용자, 종사자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그 이후에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1일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72개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입소자와 이용자, 종사자 3000여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2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와 이용자·종사자 ▲75세 이상 노인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장애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74세 노인 ▲장애인·노인돌봄 종사자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종사자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요원 등이다.

시는 오는 7일까지 72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와 이용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이후 백신 수급량에 맞춰 접종 동의를 한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화이자 백신이 접종된다.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장애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은 이달 중순부터 보건소에 내소하거나 시설 방문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된다.

5월부터는 65~74세 노인과 장애인 및 노인돌봄 종사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종사자,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요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백신 접종은 ▲발열체크 및 접종대상자 확인(신분증 지참) ▲예진표 작성 ▲의사예진 ▲백신접종 ▲접종 전산등록 및 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가량) ▲귀가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오는 5일부터 예방접종 전 문의사항 및 예약관리, 접종 후 이상반응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가동한다.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시는 또 75세 이상 노인들의 접종편의를 위해 접종시간대별로 순환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신선 소장은 "안전하고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멈추고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무원, 미얀마 지지 성금 1500만원 모금

민주화지지 위한 연대조직 통해 모금운동 지속

전주시 공무원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았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공무원들이 미얀마 민주화지지 모금운동을 통해 성금 1,500만원을 모금했다고 1일 밝혔다.

'얼굴 없는 천사' 도시로 유명한 시는 목표금액을 1,004만원으로 정해 김승수 시장을 시작으로 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져 이틀 만에 목표했던 모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이날 모금된 금액은 추후 전주시와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얀마 민주화 지지를 위한 연대조직에 전달될 예정으로, 모금운동은 연대조직을 통해 지속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미얀마에 하루빨리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주시 모든 공직자들이 뜻을 모았다"며 "전주시청 공무원은 물론 4대 종교단체와 시민연대 모임을 주축으로 민주화지지 모금운동을 지속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3기 회장도시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이끈다

회장도시 선출… 관련 법 제·개정 촉구·대응 지자체간 협력 등 추진

전주시가 제3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 회장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최근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3기 회장도시로 만장일치로 선출돼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간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재생사업 등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원주민과 영세업자 등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는 제1기와 2기 회장도시였던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4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각 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해결하고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6년 협의회에 가입, 2018년 협의회 부회장을 맡았던 시는 그간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지역 상생협의회 구성 ▲지역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논의 위한 지역상생위원회 구성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토대 마련에 주력해온 결과 회장도시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향후 회장도시로서 ▲지속가능도시 추진 대책 제안 및 정책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 촉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지자체간 협력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의 안건을 회원도시들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전주객사길과 첫마중길의 경우 시, 임대인, 임차인 3자간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 건물에는 외관정비를 지원해줬다. 또 주민 대상 교육과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하고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하는 프리마켓과 길거리 환경정비 등의 사업도 벌였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는 2019년부터 '함께가게' 운동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는 가게들을 지원해왔고, 중개인 60여 명이 참여해 수수료 인하 협약을 맺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캠페인도 전개해왔다"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추진

방치된 빈집이 밀집해 있는 전주 팔복동 신복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다. 특히 그린숲도서관, 그린 집수리, 테마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녹색 생활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팔복동 신복마을에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는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오손·도손 함께 가꾸는 그린 신복마을'을 비전으로 주거지 쇠퇴를 막고 마을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해 도시 활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먼저 시는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 거점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 노인주택 32호, 청년주택 18호 등 공공임대주택 50호도 공급한다. 노인교실과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오손·도손 돌봄 방앗간'을 조성하고 아기 당산나무를 함께 키우며 책을 볼 수 있는 '그린숲도서관'도 만든다.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그린 골목길 조성, 노후주택을 고효율·친환경적으로 고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온실과 수다가든이 만들어지고, '사회혁신발전소'와 '그린예술발전소'도 운영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만경강 일부 구간 취사·야영·낚시 금지

전주시는 다음 달 국가하천인 전주천 하류 7㎞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비비정 및 신천습지 일원) 6.5㎞ 구간을 취사·야영·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 동물 및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주천과 만경강은 최근 낚시객과 야영객이 증가해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에 위협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일반쓰레기 투기 급증 ▲떡밥·어분 사용 및 취식 후 잔반 투기 ▲하천 내 차량 진입 캠핑 ▲갈대와 억새밭 방화 ▲밤샘 낚시 등으로 수질오염 및 하천경관 훼손 등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전주천과 만경강 일부 구간을 취사·야영·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키로 했다. 더불어 만경강 구간은 금지지역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완주군 구역(만경강 우안)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금지지역에서 취사·야영·낚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천과 삼천을 낚시 등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수질을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수달 보금자리·반딧불이 서식처·맹꽁이 서식지 등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멸종위기 동물을 발견할 수 있는 야생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로써 전주시를 관통해 흐르는 주요 도심하천(전주천, 삼천) 전 구간이 낚시 등 금지지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의 혈관인 하천이 우선 되살아나야 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낚시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